

국회 교육위서도 불거진 '조국' 논란

한국당서 딸 의혹 언급하자 여야 공방...20여분 정회

"교육부 장관이 조국 대변인" vs 與 "정치공세 과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교육위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2018회계연도 결산'과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조 후보자의 자녀와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웅동학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질의하면서 공방은 시작됐다. 결국 회의는 20여분 간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현안질의를 통해 유 부총리에게 조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 이른바 '가진 자의 꿈수 출세코스'를 언급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인문계 특목고의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을 하고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인가"며 "지금 제기되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학부모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과거 이사로 재직했고 현재는 모친이 이사를 맡고, 배

우자가 이사로 있는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이 건은 조 후보자의 일이 아니고 웅동학원이라는 사학에 대한 의혹"이라며 교육부 차원의 감사 및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하겠다"면서도, 김 의원의 '의혹을 해명할 만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로 요청할 문제고 청문회에서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질의가 길어지자 이찬열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 소속)은 김 의원에 수차례 발언 마무리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이 질의를 마무리하지 않아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회의 정회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여야 공방은 이어졌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왜 회의를 마음대로 진행하느냐"며 항의했고, 여야 의원과 유 부총리 사이에 언쟁도 벌어졌다.

김 의원이 "기사가 나오는데 (교육부가 사실관계 파악에 소극적이다)"라고 말하자, 유 부총리는 "기사가 다 사실이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대해 전희경 한국당 의원이 "유 부총리가 조 후보자의 변호인이냐"고 따지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여기는 인사청문회장이 아니다. 정치공세를 하려면 정도껏 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유 부총리 또한 "(조 후보자의) 비리를 확인할 수 있느냐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부터 열라"고 반박했고, 그러자 전 의원은 "교육부 장관이 조국 변호인을 하러 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공방은 회의가 속개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국민들은 (조 후보자 딸이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하는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데 대해 분노한다"고 했으며, 전희경 의원은 "(부총리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기까지 논할 권한이 없다. 부총리 할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말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아이와 가족 관련 얘기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몇 가지 팩트체크를 해야겠다. 조 후보자 딸이 입학한 외고에 외국에서 온 학생을 위한 정원의 전형이라는 것은 없으며, 딸이 입학한 대학에도 논문 가산점은 없다"고 강변했다.

유 부총리도 "인사청문회 때마다 사실이 아닌 것이 언론을 통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됐던 과정이 얼마나 많았느냐"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의 발언에 한국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장이 잠시 소란스러워졌지만, 이 위원장이 이를 중재하며 산화를 선포하면서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는 세시간 여만에 마무리됐다.

서울=김윤호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아젠다 정계 개편 내용을 담은 '손학규 선언'을 하고 있다.

손학규 "안철수·유승민 함께 가자...한국당과 통합 생각말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0일 "다함께 바른미래당으로 튼튼하게 자리잡고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의 모든 개혁세력이 제3지대에서 함께 모여 대통합개혁정당을 만들어 총선에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손학규 선언'을 통해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화합하자"며 "안철수·유승민 전 대표, 저와 함께 가자. 이제 싸우지 말고 함께 승리의 길로 나가자"고 밝혔다.

손 대표는 당내 반대파를 향해 "다른 당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며 "더군다나 당을 통째로 이별고 자유한국당과 통합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당에 가서 2번 달고 또는 1번 달고 선거에 나갈 것이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말자. 뚜렷하게 3번 달고 나가서 당당하게 당선되자는 믿음과 자신을 가지자"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정치, 제3의 길을 수행하기 위한 새판짜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제게 남은 꿈과 욕심은 한국정치의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라며 "의회가 충분한 권한을 갖고 대통령과 국회가 협조해 국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정당간 협조와 연합으로 국정이 안정되고 원만하게 운영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저의 마지막 꿈"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중도통합, 중도 개혁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며 "바른미래당을 통한 한국정치의 개혁은 제가 지고 가야 할 마지막 짐"이라고 했다.

또 "승자독식 양당체제를 바꾸어

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할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첫걸음이고 국정 운영을 위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독일과 같은 총리중심체제가 바람직하겠지만 대통령제에 익숙한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2원집정부제도 가능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국무총리는 의회가 선출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국무총리가 나머지 국정을 돌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저는 2006년 민심대장정을 할때 100일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모든 생활을 거의 다 겪으면서 한국정치가 나갈 길을 생각했다"며 "2000년에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을 책으로 써내면서 한국적 제3의 길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에는 춘천 생활을 마치고 나오면서 '함께 잘사는 나라'를 정치적 모토로 내세우고 2011년에는 민주당 대표로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2012년에는 '저녁에 있는 삶'을 대선 구호로 내세우면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그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16년에는 강진에서 올라오면서 '7공화국'을 내세웠고, 작년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루기 위한 단신도 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저의 정치 역정은 중도개혁의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꾸준하고 일관된 정치 철학이기도 했다"며 "이제 우리는 중도개혁의 정치를 위해 민주주의, 시장경제, 평화체제의 3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 다함께 나설 것을 제의하는 바"라고 밝혔다.

홍준표 "조국 임명되면 검사들 총사직하고 한국당 의원 한강 가라"

"검사들은 자존심도 없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검사들은) 총사직하라"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검사들아, 니들은 자존심도 없냐. 저런 사람 밑에서도 검사하냐"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이를 (임명을) 막지 못하면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한강으로 가라"고 했다.

뉴스1

청와대, 불어나는 조국 의혹에 "도덕성·정책 종합적 검증해야"

"사전검증서 문제 없었나" 질문에 "여부 알 수 없어"

청와대는 20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그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해 '도덕성'과 '정책' 양 측면에서 "후보자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관련 질문을 받고 "모든 후보자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후보자가 해명할 사안이 있으면 국민들께 해명을 해야 되고, 정책은 정책대로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을 밝힘으로써 후보자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 딸의 대학 장학금 및 논문 제1저자 등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사전 검증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냐'는 질문에 "검증 과정에서 보도되고 있는 이슈들이 검증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 시스템은 민정수석이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검증은 검증대로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1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가짜뉴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